우암학원 창학 76주년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光州日報
74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665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12월 4일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광주·전남 통합,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무려 3시간 가까이(173분) 25개의 쏟아지는 질문에 답하며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구상과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광역 통합은 국가 생존 전략…행정·재정·제도 지원 끝까지 책임질 것
과실 나누는 모두의 성장 전환…남북 평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흔들림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2·3면〉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통합자치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대전환(지방·모두·안전·문화·평화) 비전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첫번째로 '5극 3특 체제'(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를 골자로 한 지역분권 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5극3특'은 수도권 1극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을 권역별로 통합해 집중지원하는 분권형 지역성장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각 지역이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걸맞은 '규모의 경제'를 갖춰야 한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광역 통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필수 과제"라고 못 박았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낙후한 호남권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시사했다.

통합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정치적 셈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이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대안을 찾되,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통합 속도 조절론이나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회와 과실을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국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벤처 열풍을 계승해 '제2의 스타트업 붐'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9·19 군사합의 복원과 남북 대화 재개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경제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을 좀 미루더라도 평화공존 상황으로 만들어야 하며 북한은 지금도 연간 10~20개 핵무기 만들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며 단계별 평화론을 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면 불공정을 바로잡을 수 없다"며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을 예고했다. 그는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하면 저성장의 늪과 민주주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지방이 주도하고, 국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국정 역량을 재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 개입 문제와 관련 "종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안되고 반란행위와 같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고, 주가조작 관련해서도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내란 성공 기대하고 가담"

검찰 구형보다 8년 많아
전직 국무총리 첫 법정구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관련기사 6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징역 15년)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범죄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공문서인 비상계엄선포문을 허위 작성했다가 폐기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 요지를 밝히면서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허위작성 공문서(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행사 등 혐의를 제외하고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주고,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도록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할 목적으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할 것을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

명칭 : 전남광주특별시
약칭 : 광주특별시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 공감대

광주·전남 통합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다만 대외적인 약칭은 '광주특별시'를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2차 조찬 간담회'가 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통합추진특별위원회 의원 1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다수의 참석자는 통합 자치단체의 정식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되, 약칭은 '광주특별시'를 사용하는 절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발의될 특별법에 통합지방정부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로 명시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인구와 지역세가 상대적으로 큰 전남을 정식 명칭의 앞자리에 두어 전남 도민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한편, 국제적인 인지도와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광주'를 약칭으로 활용해 실리를 챙기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지역 A의원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되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하는 안과, 명칭 순서와 주 청사 위치를 연계하는 '빅딜' 안 등이 논의됐다"며 "오는 25일 광주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전남광주특별시로 명칭을 정하면 단체장의 집무실을 광주에, 광주전남 특별시로 하면 반대로 전남에 두는 방안이다. B의원 역시 "약칭은 대외적인 도시 경쟁력을 위해 '광주'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남광주특별시라는 정식 명칭에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명칭과 청사 위치를 맞교환하는 '빅딜'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광주·전남 정치권은 오는 25일 오후 4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명칭과 주요 쟁점 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이달 말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